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재 불복 행정소송 1심 패소

김어준, 대선 당시 개인 유튜브서 지지 발언 방통위 "특정후보 지지...규정 위반" 경고 TBS 측 "의도적 발언 아냐" 행정소송 제기 1심 "지지·공표행위 해당...처분 위법 없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했던 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지를 개인 유튜브에 공표했다는 이유로 TBS에 내리진 법정 제재에 대해 1심 법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가 선거방송심의

에 관한 특별규정(특별규정이 말하는 공표가 아니라고 다뤘으나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별규정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별규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이상 (김씨의 발언은) 지지·공표행위에 해당하고 방통위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본다"며 판결 이유를 전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 '다스피이다'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지

난해 김씨가 한 발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해 특별규정 제21조 3항을 위반했다며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하고 TBS의 재심 신청도 기각했다. 해당 규정은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를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TBS 측은 "김씨 발언은 개인 유튜브에서 한 발언으로 후보의 삶에 대한 개인적 감상과 논평일 뿐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의도적 발언이 아니었다"며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에서 비슷한 사안이 문제없음으로 결정된 것과 다른 잣대가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법정 제재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지난해 5월 법원은 "특별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원칙을 준수했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TBS 측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2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지 6년3개월여만에 하차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3년6개월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태극기 팔찌 만드는 어린이

18일 서울 성북구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제11회 4.19혁명 국민문화제에서 한 어린이가 태극기 팔찌를 만들고 있다.

여신도 성폭행 정명석, 추가 기소 '혐의 부인'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 고수해야"

외국인 여신도를 준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받는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이 재판에서 추가 기소된 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8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추가로 기소된 무고 및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병합해 진행했다.

검찰은 "정명석이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해 5월 여신도 2명에게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 2명이 허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했다는 사실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게 하려고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게 했다"라며 "2018년 8월 4일 오전 외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이어 정명석이 누범기간 중 성폭력을 저질렀고 정신적 지배를 해 여신도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수법을 봤을 때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명석 측 변호인은 "현재 1심 판결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는 상황에서 고소인들에 대한 무고나 역무고 등 1심 판결 전까지 진실을 알 수 없다"라며 "추행 범죄 사실은 단 1건의 추행이며 무릎과 허벅지 등을 살짝 잡아당겨 같이 탄 사실은 있지만 추행할 상황이 아니었고 추행한 사실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명석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 발부를 검토할 방침이며 피고인 측 변호인들에

게 변명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재판부는 녹취록에 대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정명석 측 변호인들에게 향후 재판에서 조작이나 변조된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검증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증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명석 측 변호인들은 해당 녹취록 원본이 수사기관 실수로 삭제됐고 현재 있는 파일은 웹디스크에 올라가 있던 파일로서 원본과 같다는 동일성이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증을 위해 포렌식 디지털 전문가 등을 불러 증거 능력이 있는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검증 절차를 진행하려 했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라며 "검증 절차에서 필요한 주장을 하면 되고 현재 존재하는 녹취록 파일이 사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녹취록 파일에 대한 검증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 및 호주 국적의 외국인 여신도와 외국인 여신도 1명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과정을 도운 JMS 2인자로 불리는 정호은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민원국장은 정명석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됐다. 나머지 조력자 4명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하고 주기가 일정하다는 등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뉴시스

"도박 빠져" 공금 횡령·변제 회피까지...중소업체 대표 영장

개인 투자 자금·도박비를 마련하고자 회사 공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채 도산까지 이르게 한 중소기업 대표가 구속 위기에 놓였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를 받는 지역 중소기업 대표 A(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 6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공금 34억 원을 40여 차례에 걸쳐 개인 계좌로 송금,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도 자신 명의의 주택 23채(19억 원 상당)를 은닉, 강제집행을 피해 채권자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1인 중소기업 대표인 A씨는 가로챌 공금을 개인 도박과 위험이 높은 선물 옵션 투자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모는 작지만 건실했던 해당 업체는 A씨의 횡령 행각으로 경영난에 놓였고, 임금 상습 체불로 직원 퇴사가 잇따랐다. 결국 최근 기업이 도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이슬비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